

No. 2013-43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10. 28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  
: 민간·경제교류로 돌파구 모색하는  
중일관계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## 1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간 현황지표

- 엔화환율 : 美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장기화전망 확산으로 강세
- 장기금리 : 美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장기화전망에 따른 일본 국채에 대한 매입 수요 증가로 하락세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10.21(월)  | 10.22(화)  | 10.23(수)  | 10.24(목)  | 10.25(금)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    | 98.05     | 98.32     | 97.40     | 97.46     | 97.26     |
| 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    | 1,084.56  | 1,081.69  | 1,081.93  | 1,085.09  | 1,085.59  |
| 닛케이평균주가(종가)          | 14,693.57 | 14,713.25 | 14,426.05 | 14,486.41 | 14,088.19 |
| 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 | 0.620     | 0.615     | 0.605     | 0.605     | 0.615     |

### 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3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는 8개월째, 전년 동월비로는 4개월째 연속 상승
- 2013년 9월 무역수지는 9.3천억엔 적자로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
  - \* 對한국 무역수지는 1.9천억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

| 구분             | 2012       | 2013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월     | 2월    | 3월    | 4월     | 5월    | 6월    | 7월    | 8월    | 9월    |
| 실질GDP증가율(연율,%) | 1.2(2.0)   | 4.1(P) |       |       | 3.8(P) |       |       | -     |       |       |
| 수 출(천억엔)       | 639(637)   | 48     | 53    | 63    | 58     | 58    | 61    | 60    | 58    | 60    |
| 수 입(천억엔)       | 721(707)   | 64     | 61    | 66    | 67     | 68    | 62    | 70    | 67    | 69    |
| 對한국 수출         | 49.7(49.1) | 4.01   | 4.25  | 5.21  | 5.07   | 4.61  | 4.54  | 4.77  | 4.59  | 4.57  |
| 對한국 수입         | 32.8(32.4) | 3.12   | 2.92  | 2.81  | 2.58   | 2.85  | 2.57  | 3.04  | 2.78  | 2.72  |
| 직접투자(억달러)      | (1,223)    | 234    |       |       | 331    |       |       | -     |       |       |
| 對한국 투자         | (40)       | 7.7    |       |       | 9.1    |       |       | -     |       |       |
| 소비자물가(전기비,%)   | ▲0.2(0.0)  | ▲0.3   | 0.1   | 0.3   | 0.3    | 0.2   | 0.0   | 0.1   | 0.3   | 0.1   |
| 실업율(%)         | (4.4)      | 4.2    | 4.3   | 4.1   | 4.1    | 4.1   | 3.9   | 3.8   | 4.1   | -     |
| 경상수지(천억엔)      | 42.9(47)   | ▲3.6   | 6.4   | 12.5  | 7.5    | 5.4   | 3.4   | 5.8   | 1.6   | -     |
| 엔화 對미달러 환율     | 82.9(80.1) | 89.2   | 93.2  | 94.8  | 97.7   | 101.0 | 97.4  | 99.7  | 97.9  | 99.2  |
| 환율 對원화(100엔)   | (1,413)    | 1,197  | 1,166 | 1,161 | 1,148  | 1,100 | 1,165 | 1,130 | 1,142 | 1,095 |
| 외환준비고(기말 천억달러) | 12.5(12.7) | 12.7   | 12.6  | 12.5  | 12.6   | 12.5  | 12.4  | 12.5  | 12.5  | 12.7  |
| 국채금리(10년, 연리%) | 0.560      | 0.740  | 0.665 | 0.560 | 0.600  | 0.860 | 0.855 | 0.795 | 0.720 | 0.680 |

주1. ( )는 역년(1~12월)기준

2.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3. (P)는 2차 속보치(개정치)

### 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아베노믹스의 4가지 시나리오: 디플레 계속, 금융억압, 고인플레이, 해피엔딩』 자본시장연구회, 10월 22일

\*출처: <http://www.camri.or.jp/annai/shoseki/gekkan/2013/pdf/201310-11.pdf>

- 『일본경제재생에 관한 3개 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』 경제사회종합연구소, 10월23일

\*출처: <http://www.esri.go.jp/jp/workshop/forum/130925/gijisidai.html>

## ② 주간경제이슈 : 민간·경제교류로 돌파구 모색하는 중일관계

### □ 중·일 교류단 상호 방문

- 중·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, 중국이 강경일변도의 대일 태도를 수정하기 시작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- 9월 중국기업의 CEO들이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을 방문한데 이어, 중·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35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2일 북경에서 개최

\* 중국의 대일교류단체인 중·일우호협회가 주도

### □ 일본기업과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중국 지방정부가 앞장

- 특히, 중국의 지방정부가 일본기업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기 시작
- 중국의 지방정부는 정치만이 아니고 경제분야까지 관계가 냉각되는 이른바 「政冷經冷」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
-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23일 개막된 국제전본시 서부국제박람회에 약 70개의 일본기업과 지자체가 참가
- 12년에는 반일 데모로 개막전일 일본기업들의 부스가 철거되었으나, 이번에는 중국 측이 일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재해예방을 주제로 일본의 추진상황을 소개
- 최근 중국의 대일 대응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,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이 끝나고, 고용창출형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, 그리고 재차 대외개방을 통한 안정성장이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
- 환경과 의료 등 일본의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큼
- 중국이 이웃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면,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
- 특히,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외국 인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
- 최근 일본을 방문한 중국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관계까지 냉각되는 경우 중·일 관계를 타개할 실마리가 없어지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

### □ 방일 중국인 수도 크게 증가

- 일본정부관광국(JNTO)에 의하면, 2012년 9월 센카구도(중국명, 다오이다오) 분

쟁이후 감소되고 있던 방일 중국인 수가 1년 만에 플러스로 반전

- 특히 12년 가을부터 방일 중국인의 60~70%를 점하는 단체방문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, 현재는 중국내 방일 관광에 대한 자숙분위기가 풀려 회복 추세

## □ 중·일간 군사적 긴장도 완화

- 13년 1월에는 중·일관계가 가장 긴박했던 상황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 지기도 했는데,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상태로는 좋지 않다고 지시
- 이에 따라 중국 외무성은 ▷센카쿠도의 영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음을 인정 ▷분쟁을 보류 ▷분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등 3가지 방침을 결정
- 중국은 일본에 원칙론에서는 양보하지 않았으나,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입장임

## □ 그러나 중·일 관계 해빙까지 시간이 걸릴 듯

- 그러나 경제교류가 시작되더라도 중·일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약한 편임
- 특히, 중국은 센카구도를 둘러싼 자세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닛케이신문은 보도하고 있음
- 이와 관련하여 아베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점에 대해서도, 중국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라고 반발하고, 연말까지 방위계획대강 작성과 집단적 방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논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,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음
- 닛케이신문은 중국이 우선은 민간과 경제교류를 재 시동시켜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을 끌어내려는 속셈도 있다는 점을 들어, 중·일 관계가 해빙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
- 센카쿠도 문제와 관련하여, 중국 지도부도 일본으로부터 타협을 끌어내지 않으면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어, 중·일 관계의 본격적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
- 앞으로 초점은 11월로 예정된 약100명 규모의 일중경제협회의 방중단 파견임
-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, 경제논리만으로는 대립을 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, 어떻게 충돌을 피하고 협력할 것인가, 그리고 민간외교가 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에 주목되고 있음

### ③ 경제정책동향

#### □ TPP 겨냥, 쌀에 대한 고가격 유지제도를 재검토

- 일본정부가 쌀의 수확량을 조정하여 고가격을 유지하는 생산조정제도의 축소·철폐 등을 검토
  - 이는 아베정부가 TPP를 겨냥하여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대규모 생산자를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, 생산조정 보조금 삭감도 검토 중
  - 그러나 농업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현행 생산조정제도 하에서는 농림수산성이 매년 11월경에 다음해 주식용 쌀 생산수량목표를 결정한 후, 도도부현(都道府県)별로 수량목표를 할당하고, 농가가 그 범위 내에서 생산하고 있음
  - 수요에 맞추어 쌀 생산을 조정하여 가격을 유지할 목적에서임
- 유력한 검토안의 하나는 생산조정에 대한 관여를 줄이는 것임
  - 농림수산성은 쌀의 수급전망을 제시하는데 그치고, 생산수량 목표 설정 등은 자치제 중심으로 맡기는 방안임
  - 도도부현 간의 생산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자치체가 대규모 경영을 목표로 하는 생산자에게 생산한도를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함
- 앞으로 수년 후를 목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이행하여 대규모 생산자가 자유롭게 주식용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, 산업경쟁력회의의 민간의원들 가운데는 생산조정제도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
- 일본 정부는 14년도부터 신제도로 이행하기 위해 13년 11월말을 목표로 정부 방침을 확정
  - 10헥타르 당 15,000엔의 보조금을 수천엔 이상 줄임으로써 생산조정의 메리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대상자도 약 11만 건에서 대폭 축소
  - 쌀의 실제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에 차액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변동보조금도 없애 생산자의 자립을 촉진시키는 한편, 사료용 쌀과 가공용 쌀은 보조금을 늘림
-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수의 안을 기초로 생산조정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경우, 쌀의 생산면적과 수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
- 생산조정제도는 민주당 정권 당시 2010년도에 쌀 농가에 10헥타르 당 15,000엔의 정책보조금을 지급하는 호별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했는데, 동 제도는 생산조정에 따르는 것이 지급의 조건

- 아베 정부도 동 제도를 계승했으나 야당시대에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한 경위도 있어 재검토를 추진하게 된 것
- 그러나 정부여당 내 조정기간도 1개월 정도로 짧아, 농업단체의 반발도 예상

## □ 경제산업성, 해상풍력발전 육성키로

- 일본정부가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을 육성하기 위해, 전력회사의 풍력매입가격을 내년도부터 인상키로 함
  - 해상풍력에 대한 높은 전용가격제도를 신설하여 육상 풍력의 1.5~2배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
  - 동시에 민간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태양광 가격은 인하하고 풍력에 대한 투자도 유인함으로써 에너지를 다양화하려는 것이 목적
- 일본 정부는 13년도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책정할 방침임
  - 장래 원전의 신·증설 가능한도가 불투명한 가운데,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재생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
  - 11월에 경제산업성이 검토에 착수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실증시험과 해외사례를 기초로 해상풍력의 건설비용과 발전효율 등 가격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
  - 새로운 매입가격은 경제산업성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내년 봄까지 최종결정
- 일본정부는 2012년 7월 재생가능에너지의 매입을 전력회사에 의무화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했는데, 풍력의 매입가격은 킬로와트 당 22엔으로 채산이 맞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음
  - 일본의 고정가격매입제도는 초년도에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가격이 책정된 영향도 있어 이제까지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발전설비의 90%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
  - 풍력은 적합한 지역이 북해도와 동북지방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데다, 환경영향평가에도 시간이 걸려 도입이 부진한 실정
-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입 잠재력이 육상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
  - 현재 마루베니 등이 이바라기현에서 출력 24만킬로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르면 201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내년도부터 유리한 매입가격이 설정되면 다른 민간기업들도 잇따라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
## 4 일본기업동향

### □ 후지츠, 전자제품 생산전문기업(EMS)으로 변신

- 후지츠가 제조수탁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
  - 3D프린터를 사용한 시제품에서 전자기기의 양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을 수탁하게 되는데, 주로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고기능제품과 소량부품을 수탁생산
  - 고품질·단납기를 경쟁력으로 한 대만 등의 수탁서비스에 대항하고, 일본 국내 제조업의 모노즈쿠리기반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일본기업들은 엔고를 비롯한 6중고의 영향으로 대만기업에게 가전과 IT 분야의 EMS생산방식을 위탁해 왔음
- 후지츠는 일본의 인건비가 높기는 하나 축적된 생산기술을 잘 활용하면 대만과 중국의 EMS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그룹 내에서 일본 국내에 23개 생산거점을 가진 후지츠는 PC와 서버, 휴대전화의 조립에서 생산설비제조, 정밀부품의 가공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음
- 새로운 수탁사업은 이들 생산거점을 활용하여 시제품과 부품, 컴퓨터, 가전, 의료기기 등의 제조를 수탁하게 되는데, 2016년까지 300억 엔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음
- 후지츠는 2004년에 도요타자동차의 토요타방식(TPS)를 도입하고 여기에 IT수법을 접목하여, 후지츠 생산방식(FJPS)을 개발
  -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있는 후지츠의 생산라인은 중국의 EMS의 1/7 인원으로 노트북을 조립하는 등 생산성이 매우 높음
- 후지츠는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단납기로 일본 국내 업체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품과 수량이 적지 않고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부품 등의 생산을 수탁하겠다는 전략
  - 범용품은 여전히 대만과 중국의 EMS쪽이 코스트경쟁력에서 앞서나, 일본 국내용 고기능·고품질 제품과 다품종소량제품에 분야에서는 대만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



## □ 파나소닉의 반도체부문, 7,000명 인원감축

- 파나소닉이 반도체사업을 대폭 축소
  - 약 14,000명의 종업원 중(연결종업원) 2014년도까지 약 7,000명을 감축하고 해외기업과 일부 공장의 매각도 추진함으로써, 반도체부문의 경영자원을 자동차용과 산업기기분야로 전환
- 파나소닉은 반도체사업의 부진으로 2013년 3월까지 2분기 연속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TV, 휴대전화에 이은 구조개혁을 가속화
- 일본의 대형 가전업체들은 반도체를 가전 등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확대해옴
  - 그러나 한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격화로 채산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, 최근 수년 동안 반도체 사업을 핵심 사업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
  - 파나소닉의 구조조정으로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더욱 축소될 전망
- 파나소닉은 일본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에 반도체 주력공장이 있는데, 이제까지도 생산능력을 축소해왔으나 매출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
- 일부 공장은 이스라엘의 반도체수탁생산(파운드리) 업체인 타와지즈와 매각교섭에 들어가 이르면 금년 중 합의할 예정
- 반도체사업의 종업원은 해외공장 중심으로 감축할 예정
  - 일본 국내는 이미 조기퇴직을 마무리하고 전환배치로 대응
  - 종업원 감축으로 2013년 회계연도에 500억 엔의 구조개혁비용을 예상하고 있으나 경영실적 개선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반도체 개발은 TV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가전용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차체와 산업기기용으로 중심축을 이동
  - 파나소닉은 전력제어에 사용되는 파워반도체와 센서 분야에서 자사기술력을 활용하여 외부판매를 늘려 채산성을 높일 계획



## 5 한국관련위치

### □ 한국의 TPP정책과 한일 FTA문제

- 넛케이신문이 10월 23일자 기사에서 「TPP참가, 한국의 고뇌」라는 제목으로 FTA대국을 자인하는 한국이 TPP를 둘러싸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TPP정책과 한일 FTA문제 등을 다룸
- 산업통상자원부도 TPP는 시기상조라고 입장 선회
  -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PEC회의 기간 중 TPP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발언은 없었는데, 이에 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국의 정부관계자가 발언
  - 한국 정부 내에서는 외교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,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론을 펴는 구도이나, 이번에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선회
- 한국 정부의 2단계 TPP 전략
  - 다음 고비는 연말부터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는 것
  - 그때쯤이면 한국이 내년 상반기 중 타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참가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것
  - 박 대통령은 APEC회의에서 TPP 참가국들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졌는데, 캐나다와는 금년 중 FTA교섭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
  - 한국은 12개 TPP참가국 중 미국 등 7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
    - 한국은 여타 가맹국들과의 FTA교섭을 가능한 한 추진하여 TPP가입 시 부담을 적게 하는 이른바 2단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
- 한국의 TPP참가에 일본이라는 장벽
  - 그러나 TPP참가를 결정한다 해도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
    -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은 일본과 다를 바 없으며, 한·일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으로, 일본이 이번에는 장벽

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

- 한국으로서 TPP는 사실상 2004년부터 교섭이 중단된 한일 FTA체결을 의미하는 만큼, 경합업종 관련 단체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임
- 2009년에는 약 5%였던 수입차의 한국시장점유율이 최근 12%정도까지 상승했는데 원화 강세만이 그 이유는 아님
  - 현대자동차의 경우, 일본 업체들이 한미FTA로 인하된 관세율을 활용하여 미국산 일본차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다, 유럽산 자동차의 공세까지 겹쳐 일부 차종에서 가격인하가 불가피한 상황
  - 미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 수입관세는 2016년에 철폐되는데, TPP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차에 부과하는 8%의 관세마저 없어지면,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는데다, 부품·소재 등의 수입증가에 대한 경계감도 강함
- 한국 내에서는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하여 반미, 친중 감정을 자극한다는 소리와 함께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, 반일요소까지 합세하는 경우 교섭도 국내조정도 통제할 수 없게 됨

○ 교섭단계에서 한국의 TPP참가 가능성은 낮음

- 한국이 교섭단계에서 참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데, 가령 내년 초 교섭참가를 선언하더라도 美 의회가 끝나는 내년 봄에는 큰 틀은 타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
- 한국이 타결 후에 참가했으면 하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라는 설도 있음

○ 일본의 TPP참가가 계기가 된 한국의 TPP정책 궤도수정

- 국내 반대론을 누르고 미국 등과의 FTA를 성사시킨 한국도 TPP에서는 늦어지고 있음
- 이는 대형 FTA에 대한 피로감과 자만심 때문으로, 당초 TPP에 관심이 적었던 박근혜 정부가 궤도를 수정하게 된 데는 일본의 참가가 계기가 되었다고 닛케이신문은 보도
- “언젠가는 가입해야만 하며,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”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표현이 한국의 고뇌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